

AROMIT · SAFERYN

안전보건공시제 대응 가이드

2026. 8. 1 시행 · 2027. 4. 30 첫 공시

5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를 위한 실무 안내서

발행 · 아롬정보기술 (주)

2026년 7월

목차

- 01 왜 지금 안전보건공시제인가
 - 02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 03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가
 - 04 언제, 어떻게 공시하는가
 - 05 위험성평가 개정과의 관계
 - 06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07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록 관련 법령 조항

01. 왜 지금 안전보건공시제인가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에는 한국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판도를 바꾸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 안전보건공시제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정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종래 자발적·비공개적으로 관리되어 온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이 처음으로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적 전환입니다.

두 번째 변화 · 위험성평가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개정되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의무화되고 결과 공유·기록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식적 서면 작업에 그치던 위험성평가를 실질적 예방 활동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안전보건 활동이 더 이상 '내부 문서'가 아니라 '대외 공시 자료'가 됩니다. 이는 곧, 평상시 안전 활동의 데이터화·시스템화가 법적 의무 이행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02.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2026년 3월 입법예고)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시 의무 대상입니다.

공시 의무 대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당사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이다 (상장 여부 무관)
- 당사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체이다
- 당사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다

위 세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의 적용을 받으며, 2027년 4월 30일까지 첫 공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계적 적용 예정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규칙 확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300인대 사업장도 지금부터 데이터 축적을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 대비입니다.

위반 시 제재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 보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질적 리스크는 과태료 금액이 아니라, '법정 공시 의무 위반 기업'으로 기록·공개된다는 점입니다.

03.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가

법률에서 정한 공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근거하며, 각 항목별로 정량·정성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경영책임자(CSO) 선임,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등 기본 조직 체계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사업장 내 재해 발생 이력 및 구체적 산업재해 통계 지표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위험성평가·안전점검·교육·TBM 등 실제 수행 이력과 근로자 의견 청취 결과

4 당해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당해 연도 예방 활동 계획 및 목표 수립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 이력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6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산업재해 원인 분석, 대책 수립, 이행 결과의 체계적 관리

실무 시사점

6개 항목 모두 '한 시점의 스냅샷'이 아니라 '연간 활동 이력'을 요구합니다. 즉 4월 공시 시점에 몰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원천 데이터를 축적해야 정합성 있는 공시가 가능합니다.

04. 언제, 어떻게 공시하는가

공시 시점

-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
- 첫 공시: 2027년 4월 30일 (2026년 실적 기준)
- 이후 매년 정기 공시

공시 방법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공시 전 대표자로부터 공시 내용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및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주요 타임라인

일정	주요 내용
2026. 2. 1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2026. 6. 1	위험성평가 강화 조항 시행 (제36조)
2026. 8. 1	안전보건공시제 시행 (제10조의2)
2026. 하반기	시행령·시행규칙 최종 확정 및 고용노동부 지정 시스템 오픈 예상
2027. 4. 30	첫 공시 기한 (2026년 실적 기준)

05. 위험성평가 개정과의 관계

안전보건공시제(제10조의2)와 위험성평가 강화(제36조)는 서로 다른 조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36 조 개정의 핵심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의무화 (순회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등)
-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교육·게시·전자적 방법 등)
- 미 실시·절차 누락 시 과태료 신설 (근로자 수에 따라 2027. 1. 1 또는 2028. 1. 1부터 시행)

공시제와의 연결

공시 6대 항목 중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이력과 근로자 참여 기록이 포함됩니다. 즉, 제36조에 따라 축적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데이터가 제10조의2 공시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무 관점

두 개정 사항을 별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축적 체계로 통합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안전 활동 실적이 한 시스템에서 원천 데이터로 관리되어야 공시 시점의 정합성이 확보됩니다.

06.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시점별 준비 로드맵

시기	단계	주요 활동
지금 ~ 2026. 8	시행 전	데이터 추적 체계 구축, 6대 공시 항목별 원천 데이터 수집 시작, 조직 R&R 정비
2026. 8 ~ 12	시행 초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이력 기록, 활동 실적 상시 관리, 투자 예산 집행 이력 추적
2027. 1 ~ 4	공시 준비	전년도 실적 취합·검증, 대표자 확인 절차 수행, 공시 자료 최종 정비
2027. 4. 30	공시 시행	고용노동부 지정 홈페이지에 게재

엑셀 수기 관리의 한계

많은 기업이 여전히 안전보건 데이터를 엑셀과 서면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나 공시제 대응 관점에서 이 방식은 다음 세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 실무자 인력 의존성: 담당자 변경·부재 시 안전 이력 관리에 공백이 발생
- 법적 증빙의 분산: 서로 다른 포맷의 자료가 흩어져 있어 감독기관 소명 요구 시 일관된 이력 제시 어려움
- 실시간 대응성 부재: 아차사고 등 사고 전조증상이 즉각 디지털로 보고·공유되지 못하고 사후 취합에 그침

시스템 기반 대응의 필요성

공시제는 '문서를 잘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평상시 활동을 원천 데이터로 추적하는 체계'를 요구합니다. 이는 곧, 위험성평가·순회점검·교육·근로자 참여 등 일상적 안전 활동이 자동으로 데이터로 남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세이프린(Saferyn) — 공시제 원천 데이터 관리 플랫폼

세이프린은 CSAP 표준등급 인증을 획득한 산업안전보건 SaaS 플랫폼으로, 위험성평가·순회점검·교육·근로자 의견 청취 등 평상시 안전 활동 이력을 공시 항목별 원천 데이터로 자동 축적합니다. 4월 공시 시점에 몰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정합성 있는 데이터가 쌓이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래 답변은 각 항목별로 (1) 법령 근거 기반, (2) 실무 해석 기반, (3) 시행규칙 확정 대기 중을 표시하여 독자가 정보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Q1. 500인 산정 기준은 본사만 포함되나요, 계열사도 포함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안전보건공시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산정 기준(계열사 합산 여부 등)은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계열사 통합 관리 구조를 가진 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원칙 기반 실무 해석 · 시행규칙 확정 대기 중

Q2. 이미 KOSHA-MS 인증을 받았다면 공시 의무가 면제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KOSHA-MS 인증 보유 시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KOSHA-MS는 자율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고 안전보건공시제는 법정 의무 공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KOSHA-MS 운영 이력은 공시 항목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결과 · 면제 조항 미존재 확인

Q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료로 공시 자료를 대체할 수 있나요?

A. 두 제도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자료의 완전한 대체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규제이고, 안전보건공시제는 사전적 정보 공개 의무입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핵심으로 하므로,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근거: 두 법률 조문 비교 기반 실무 해석 · 정부 공식 유권해석 미공표

Q4. 공시 자료의 검증은 누가 하나요?

A. 공시 전 대표자로부터 공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입법예고안 기준)

Q5.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현재 확인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적용 시점은 시행규칙 확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시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적용을 대비한 원천 데이터 축적 체계 구축은 규모와 무관하게 권장됩니다.

근거: 시행령 개정안 (500인 기준 확인) · 단계적 적용 시점은 시행규칙 확정 대기 중

부록. 관련 법령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0 조의 2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공시의무자는 매년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 관한 안내

본 가이드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2026. 2. 19 공포)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시제와 관련한 세부 시행규칙은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FAQ 섹션의 답변 중 '실무 해석 기반' 또는 '시행규칙 확정 대기 중'으로 표시된 항목은 정부 공식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롬정보기술은 정부 공식 자료 발표에 맞춰 본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최신 버전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시제 대응, 세이프린과 함께하세요

saferyn@aromit.com | 02-525-6897

아롬정보기술 (주)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11